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Open DART 개선 및 XBRL Taxonomy 정비 추진 (금융감독원)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문 DART 및 Open DART 구축, XBRL 주석 재무공시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번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분석을 지원하고, 재무제표의 주석 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Open DART 개선 및 XBRL Taxonomy 정비를 추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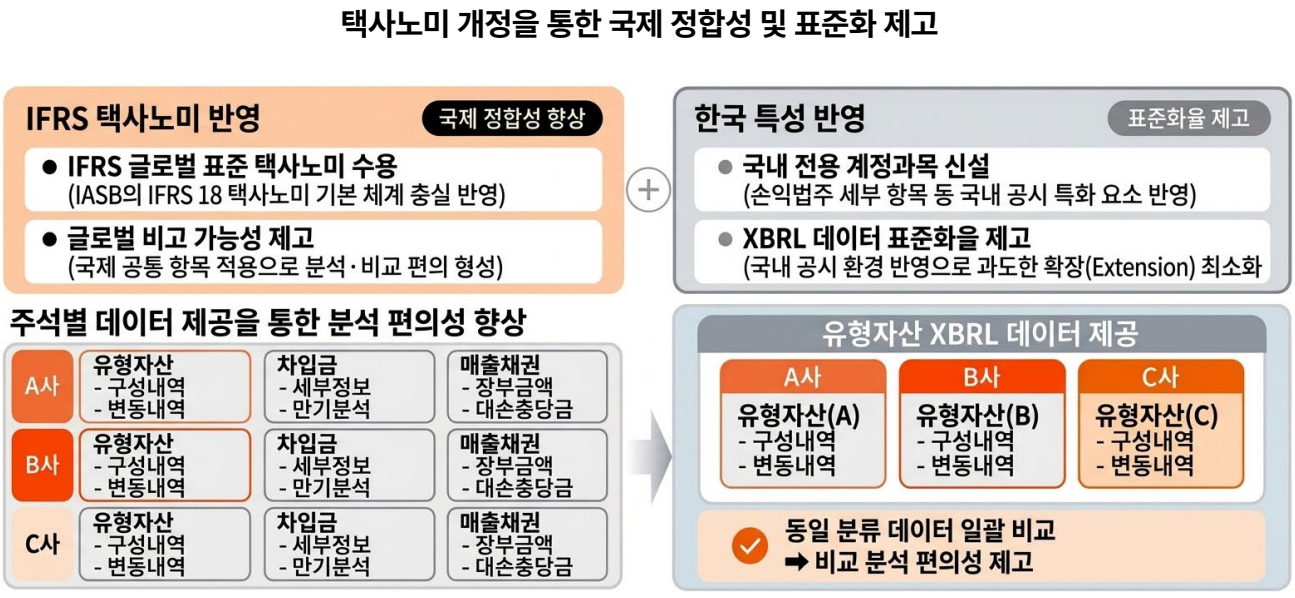
2. Open DART 개선을 통한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및 조회 편의성 제고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 상장회사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 개최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주총 안건을 충실히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었음
-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서류를 대상으로 제공하여 온 Open DART 서비스를 주주총회 관련 공시서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 □ Open DART 서비스는 공시서류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주요 공시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시정보 개방서비스로 공시 원문 데이터에 대한 Open API 제공, 웹브라우저를 통한 간편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를 지원
  - □ Open DART 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기본정보 및 주총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상정 건수가 많은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정보도 제공할 계획
  - □ DART 주총 소집공고에서 특정 안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건별 목차를 신설하고 DART 공시목록에서 총회 종류(정기, 임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목을 구분하는 방안 등 그간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
- 이러한 개선사항은 '27 년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시스템 개발 및 서식 정비 등을 완료할 계획

3. XBRL 주석 재무정보의 활용도 제고



- XBRL 주석 데이터는 개별 기업 단위이거나 전체 기업의 대용량 방식으로 제공되어, 필요한 특정 항목 중심의 정밀 분석에 불편함이 존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형자산 등 주요 주석별 데이터를 Open DART(API)로 순차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 또한, ‘27 사업연도부터 K-IFRS 제 1118 호 도입으로 XBRL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여, Taxonomy 를 정비하여 재무공시 데이터의 비교·분석 편의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변화하여 재무정보의 시장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
  - □ XBRL 은 기계 판독에 최적화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로, 기존 공시 방법(HTML, PDF 등) 대비 정보이용자가 재무 데이터를 쉽게 확보·분석할 수 있는 도구
  - □ IFRS Foundation 의 IFRS 18 국제표준 Taxonomy 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되, 국내 고유의 공시환경을 반영한 세부 요소를 보완하여 표준화율도 함께 제고할 계획
- ‘26 년 중 신규 XBRL Taxonomy 를 공개하고, ‘27 년 중 주요 주석별 데이터를 분할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데이터 분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및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1. 조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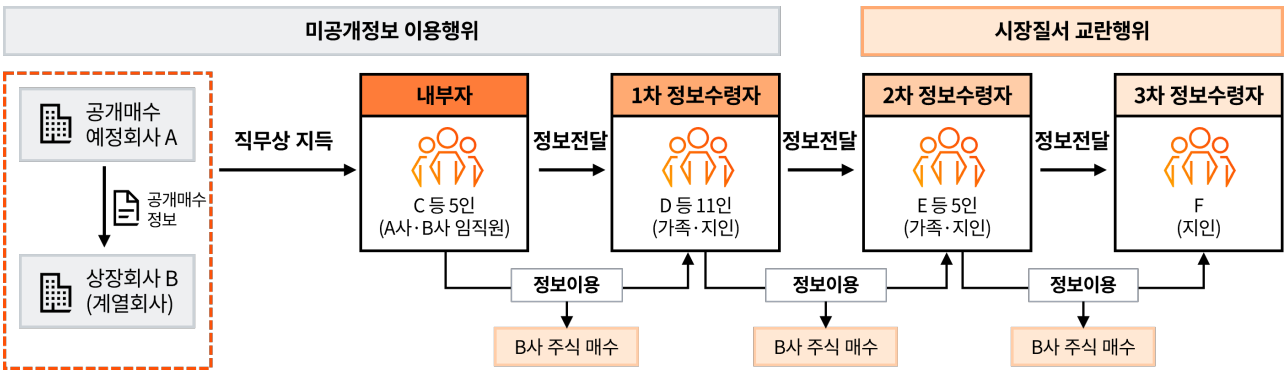
■ 증권선물위원회는 ①공개매수예정회사의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 ②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③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④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 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함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

□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들로부터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해당 상장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8 의 2①)

2. 조치 상세 내역

공개매수예정회사의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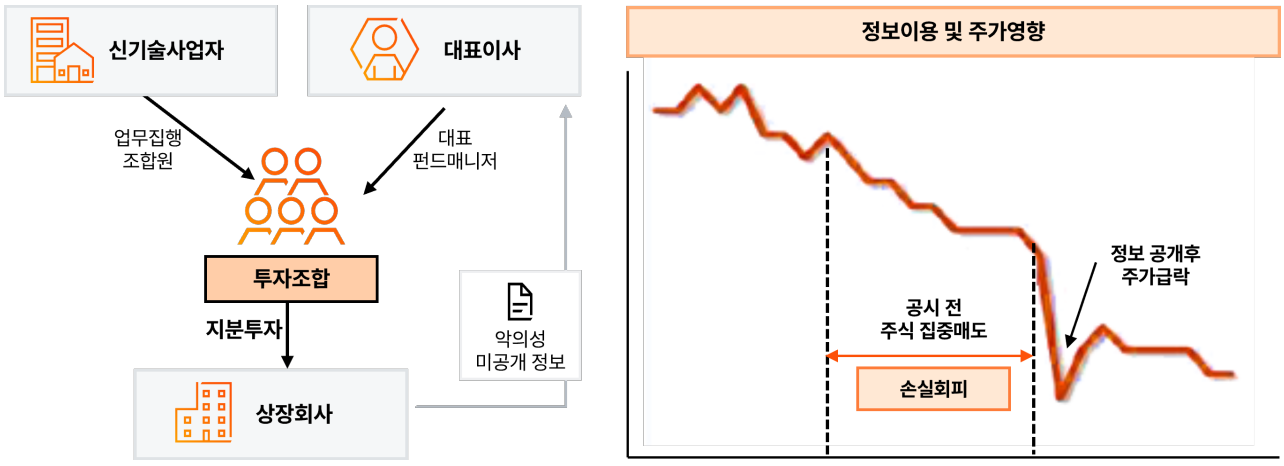
■ 공개매수예정회사 A 및 그 계열회사 B 의 입직원 C 등 5 인(내부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24.6 월부터 '25.6 월까지 B 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이나 가족 D 등 11 인(1 차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 E 등 5 인(2 차 정보수령자)은 D 로부터 동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였고, F(3 차 정보수령자)는 E 로부터 동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총 9 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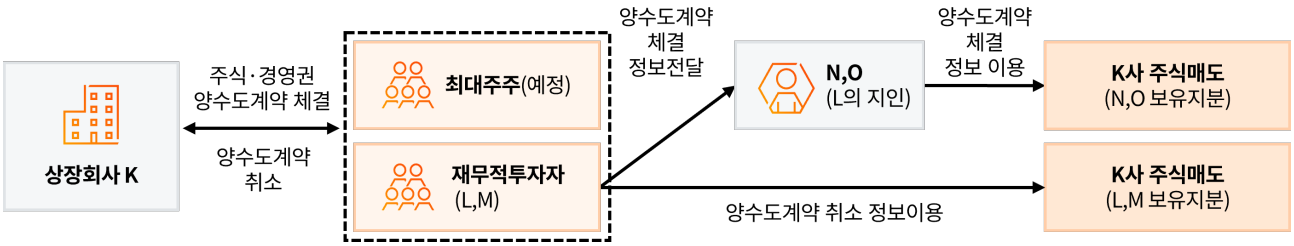
■ 또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자 중 B 사 입원 2 인은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B 사 주식을 취득·처분하여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이행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 의 대표이사 H 는 G 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 I 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J 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해당 공시 전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

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상장회사 K 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L, M)가 투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K 사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N, O)에게 전달하여 K 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고, 동 계약이 취소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양수도계약 취소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K 사 주식을 매도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Q 는 제조업체 P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내부자)으로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차명 계좌 등으로 P 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친인척 R, S 에게 본건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P 사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하여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3. 유의사항

■ 공개매수예정자(계열회사 포함),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 배) 등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최대 2 배 과징금를 부과받을 수 있음

■ 내부자, 1 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뿐만 아니라 1 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178 조의 2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 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

■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 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추진 (한국거래소)

1. 배 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5 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 일)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였고 그 중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 분	'26.1.1 일	'26.7.1 일	'27.1.1 일	'28.1.1 일
기준계획	(코스피) 200 억원 (코스닥) 150 억원	-	(코스피) 300 억원 (코스닥) 200 억원	(코스피) 500 억원 (코스닥) 300 억원
조기화	-	**(코스피) 300 억원** **(코스닥) 200 억원**	**(코스피) 500 억원** **(코스닥) 300 억원**	-

■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K 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

□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거래소가 9 월 14 일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

2. 보도 및 보도에 대한 설명

■ 조선일보는 10 월 9 일자 「설익은 '부실 기업 상장폐지', 법원이 제동 … (중략)」 기사에서 시가총액이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한 기업을 주식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절차가 7 일 전면 중단되었다고 보도함

■ 한국거래소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한국거래소는 유사 분쟁이 확산되어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잠정 유예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퇴출 절차의 전면 중단이 아니며,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음

□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종전대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투자판단에 충분히 고려하고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거래소는 향후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하거나 일부 절차를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함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